

방사선관련 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잇따라

원자력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국내 과학자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두희(李斗熙) 박사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제2위원회(선량측정학위원회) 기술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ICRP 기술위원으로 국내 학자가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CRP는 1928년 창설된 기구로 방사선 분야의 기술검토 등을 통해 방사선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방사선방호원칙과 안전기술 등을 수립해 각국에 권고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구다.

ICRP는 독립된 기구로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 세계 각국 출신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이에 앞서 역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나성호(羅性浩)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IEA)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으로 지난 92년 창설한 국제방사선직업피폭기구(ISOE) 부이사장 직에 최근 선임됐다.

과기부는 이들 두사람의 원자력관련 국제기구위원(부이사장) 선임이 한국의 관련 기술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 사회에서 한층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선생명과학 체계적 연구 기틀” 마련

류성렬 초대 회장

방사선이용기술(Radiation Technology)과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이 접목된 방사선생명과학학회가 14일 원자력의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원자력의학원 류성렬(柳星烈) 박사를 추대했다.

“그동안 방사선생명과학 연구자들이 각각의 학회로 분산돼 있어 논문 발표도 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회 창립으로 방사선생명과학의 체계적인 연구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류성렬 원자력의학원 사이버나이프센터장(56)은 이 학회의 출범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방사선생명과학학회는 방사선이용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의 접목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3년 전부터 운영돼 온 방사선생물학연구회를 기반으로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방사선방어학, 분자생물학 등 방사선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해 온 연구자들이 공동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정보의 교환, 연구결과 발표 및 새로운 연구프로젝트 개발 등이 기대된다.

류회장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방사선과 전공의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

며, 이화여대 의대 조교수를 거쳐 지난 83년부터 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방사선생물학 및 방사선응용의학 분야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 크게 발전해 왔고, 많은 연구성과도 나오며 따라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회장은 “방사선의 의료 및 생물학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는 생물학적 학술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회 창립으로 방사선의 생물학적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회장은 앞으로 독자적인 학술발표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외에도 관련 연구자들의 교환, 대학원 생을 위한 교재 제작, 최근 연구경향 및 방사선생명과학 응용기술의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시설 시공업체 주도방식 검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과의 협상을 시공업체에게 맡기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작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 협상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상당 부분의 업무를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부와 한수원이 나설 경우 주민 동의를 받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큼 정부가 지질학적으로 가능한 부지의 목록을 내놓으면 시공업체가 이 가운데 부지를 정해 주민협상은 물론 건설까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원전이 보유한 저장용량이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지만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유리 속에 밀폐시키는 유리화기술을 국내에서 갖게 된 만큼 관리시설 건설에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연내에 3~4곳의 후보지를 꼭 선정할 계획이며 정부 대신 시공업체가 이들 부지 중에서 주민과의 협상을 거쳐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의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6월까지 전국 46개 임해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공모가 실패하자 사업자(한수원) 주도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